

中國의 經濟成長과 自由貿易에 관한 고찰

- 한·중·일을 중심으로 -

최성백*
chsb20@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4. 중국경제의 대외의존전략과 한·중·일 |
| 2. 중국정부의 대외경제관 | 4.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ssociation=FTA) |
| 2.1 신정부의 경제관 | 4.2 한·중·일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TPP) |
| 2.2 중국경제의 지표 | |
| 3. 중국경제와 대외환경 | 5. 결론 |

主題語: 자유무역(FTA),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인구보너스효과(Demographic Bonus), 인구도시화(Unbanization of Population), 인구감소(Decrease in population)

1. 서론

유럽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각국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융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공업국 역할이 컸다. 특히 중국은 연평균 10%전후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세계가 중국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세계 GDP규모는 약 63조 달러정도지만 2016년이 되면 8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중국의 GDP규모는 5.9조 달러로 세계 9.4%, 하지만 2016년에는 11.6조 달러에 달해 13.1%로 증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23%에서 21%로 하락이 전망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치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 원동력은 높은 인구에 있다. 일국의 인구수는 경제성장을

* 西安培華大學 商學院 教授

가속시키게 하는 인구보너스 효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 외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게 되어 중국 국내시장은 생산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낳았다. 이 효과는 다시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중국은 아직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내준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 소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11년 시점에서 미국의 개인 소비율은 7할 정도이고 일본은 6할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은 37%정도로 4할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은 개인소비로 인한 경제성장의 동력 또한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도 불안 요인은 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동반 경기둔화조짐은 중국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지역은 중국의 핵심 수출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회복은 완만하다. 둘째는 중국경제가 경착륙될 위험이 있다. 당장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3년 후반부터 수출고정투자가 축소되어 중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치개혁의 문제이다. 그동안 胡錦濤溫家寶정권은 조화 있는 사회를 목표로 구조적인 개선을 모색하였으나 높은 기득권 앞에 개혁의 성과는 미비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등과 같은 세법도입으로 재분배정책 효과를 기대했으나 그 또한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부동산가격 폭등과 인플레이를 초래하여 지난해에는 긴축금융을 실시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국유기업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는 중국 역시 성장모델이 대외지향적인 산업구조라는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WTO에 가입한 2001년 38.5%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 51.9%에 달했고 2006년에는 67%를 기록하였다. 2011년 말에는 50.1%로 다소 하락은 하였지만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이 30%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는 무엇보다 대외시장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은 대외시장 확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개별국가 및 소규모 지역과 FTA추진은 있었으나 한-중일과 같은 거대지역과 FTA는 처음이다. 또한 중국은 TPP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아 노동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도성장을 이뤘고 이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고도성장이 마감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도 1960년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됐다. 한국은 2000~2020년까지 인구보너스 구간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중·일의 FTA와 더불어 TPP는 앞으로 중국경제의 대외전략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중국 신정부의 경제관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일 자유무역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정부의 대외경제관

2.1 신정부의 경제관

중국의 대외경제관에 큰 획을 긋는다면 역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위기 때마다 개혁·개방의 선두에 있었다. 1992년1월18일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북경에서 남쪽으로 출발하여 湖北省, 廣東省, 上海市 등 약 한 달 동안 시찰을 거치면서 각지의 개혁·개방 가속화를 독려했다. 이른바 “南巡講話”이다. 1989년6월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南巡講話”를 계기로 다시 시장경제화, 글로벌화가 진전되어 현재의 고도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南巡講話” 20년째를 맞이한 후진타오정권²⁾에 대한 불만이 높고 원자바오총리의 정치개혁에 대해 지지해주는 지도자도 더 이상 없다. 결국 지난 10년간 후진타오·원자바오체제에서 기대했던 개혁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신중국정부의 대외경제관은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 그룹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9명)의 일원으로 국가 부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발탁되었으나 2007년 제17회 당 대회에서 차기 총리후보 李克強과 함께 중앙위원(204명)에서 발탁되었다. 특이점은 중앙정치국원(25명)을 경유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2단계 특급 승진하였다는 것이다. 胡총서기와 같은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李克強과 함께 일찍부터 주목받았으나 시진핑은 상무원후보로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시진핑은 혁명공로자인 習仲勳(전부총리)의 아들로 아버지가 실각했던 문화대혁명 시대 고향농촌으로 낙향했었다. 그리고 1979년 칭화대학을 졸업하고 국무원에서 부수상의 비서관이 되었다. 그 후 중앙군사위원회의 變公廳(사무국)에서 근무했으나 군에서 근무한 경험은

2) 후진타오정권에 있어 중국의 빈부격차나 간부들의 부패문제는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으로 나타난 부정적 산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과제였다. 중국의 현재 이런 고민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개방이나 시장경제로 국내문제가 초래되었다는 견해로 개혁·개방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견해와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5세대(건국에서5세대)지도자에서 보기 드물다. 부인 彭麗媛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소장으로 유명가수이다³⁾. 겸소한 이미지의 시진핑에 화려함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군이라는 후광까지 부인이 보강하고 있어 시진핑의 대외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시진핑은 경제정책에도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30세를 전후해서 북경을 떠나 하북성 농촌부에 지방지도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32세의 나이로 경제특구 대외개방의 최전선인 福建省廈門市 부시장으로 발탁되었고 그 후는福建省, 浙江省, 上海市등 연안부의 경제선진지역에서 당서기로 근무하였다. 당시 시진핑은 베이징을 떠나 지방근무를 자원했고 오랜 지방근무를 통해 실무능력을 다졌다. 또한 그는 현장주의자이며 이념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실용파이다. 이런 그는 중국내에서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진타오정권 체제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였다면 시진핑 체제는 분배와 더불어 성장, 그것도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보다 질적 성장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질적인 면으로 안정적 성장추구 등 민생중심 경제정책추진을 달성하여 중국경제위상을 높이는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시진핑은 대외관계에 있어도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2월 멕시코 방문 때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일을 하는 외국인이 중국을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 자체가 인류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베트남과 영토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던 중국이질론이 한창일 때 발언이다. 당년 11월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천황과 회견을 강행하는 등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경제정책뿐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대외개방정책의 추구하고 고도 성장기에 경험한 다양한 문제점을 빠르게 수정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12월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의 새지도자가 교체되었다. 시진핑정권에 있어 이들 각국 지도자와 신뢰관계구축이 선결과제다. 새총리 李克强은 시진핑과 2살 차이이다. 李克强은 북경대학을 졸업하였고 공청단원이다. 河南省과 遼寧省에서 당서기를 경험한 후 최고지도부에 들었다. 부총리로 경제와 행정개혁을 담당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그 또한 중국내에서는 경제통으로 평가 받고 있어 이번 신정권의 특징은 경제적 식견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실무경험과 경제전문가 출신 총리의 결합은 경제대국으로

3)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소속으로 가무단장이다. 2012년 5월에는 인민해방군 예술학원 총장으로 이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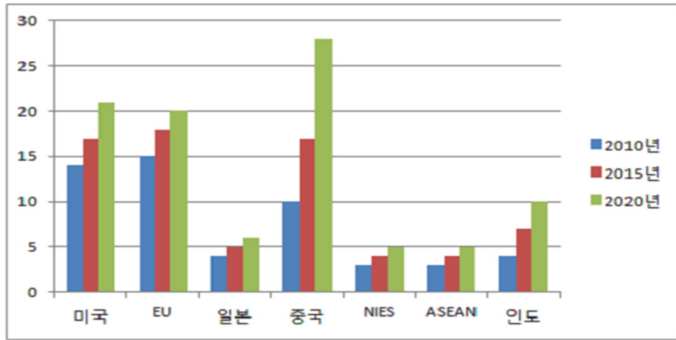
서 국제적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2.2 중국경제의 지표

1956년 여름 중국공산당 제8회 당 대회를 기점으로 모택동은 앞으로 50년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살아생전 앞으로 50년을 강조하며 30년간 농공업양면에서 도약을 위해 ‘대약진’운동을 전개했었다. 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은 모택동이 꿈에 그리던 이상의 영역에 들어섰다.

中國國家統計局, EIC(2011)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명목 GDP규모는 5조9,000억 달러(일본 5조5,000억 달러)로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2위가 되었다. 중국의 명목 GDP는 개혁·개방이 시작한 1978년 겨우 3,645억 달러에 불과 했으나 그 후 30년에 걸친 고도성장으로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아직은 미국경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7%정도 성장을 가정하면 중국경제규모는 10년 후에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현 시점을 추월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IMF(국제통화기금)은 구매력평가가 2020년까지는 미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래프 1>. 그렇게 되면 중국시장은 지금보다 한층 매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프 2>를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을 보인다. 이것은 한·미·중일과 비교했을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압도적이다. 이는 GDP규모에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프 3>를 보면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을 기점으로 경제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과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높은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1996년11월 처음 1000억달러를 넘었고 2006년10월에 1조달러를 돌파했다. 2009년6월 2조달러를 넘었고 다시 불과 1년6개월 만에 3조달러로 증가하여 2012년3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3조447억달러로 세계1위의 외환보유국가이다. 이 금액은 세계전체외화보유액의 3분1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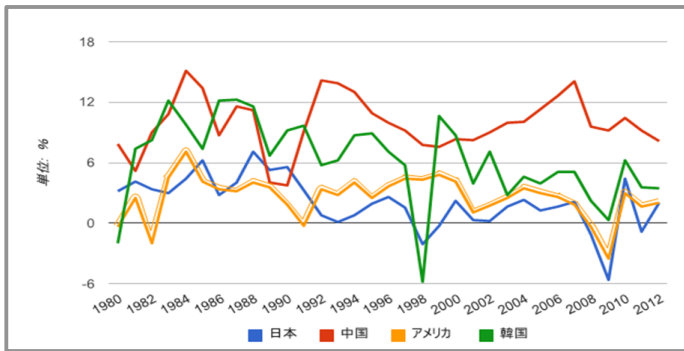
<그래프 1> 주요지역의 구매력평가 비교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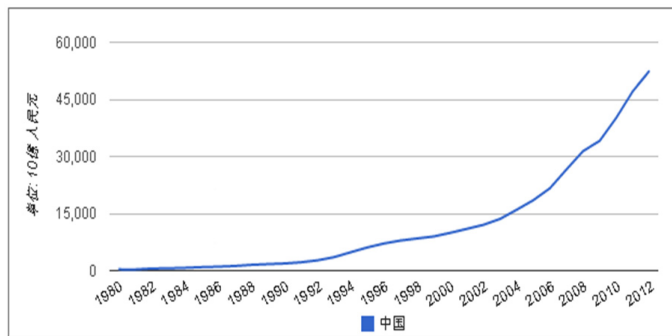
주) 2020년은 2011-2015년까지의 성장률이 계속된다는 전제임.

<그래프 2> 한·미·중·일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CEIC 데이터(2011)

<그래프 3> 중국의 GDP 규모 추이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CEIC 데이터(2011)

또한 철강생산은 세계총생산량의 50%, 자동차생산은 세계자동차총생산량의 25%를 점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고 국제금융기관에 있어 발언권 강화와 위엔화의 국제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전제가 있다. 지금 중국경제의 대외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유럽재정위기로 구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2년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당 대회가 있는 해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인사 이동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전과 같은 투자경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만약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중간소득층이 감소하게 되고 내수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중간소득층의 축소란 세계은행이 2007년에 제기한 것으로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확대로 1인당 소득이 3000달러정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나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 질적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2010년에 1인당 GDP가 이미 4000달러에 달한 중국도 그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도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5세미만)는 2015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⁴⁾. 따라서 인구 보너스 효과 감소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인구감소문제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를 도시화효과⁵⁾로 극복을 주장하고 있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 향후 약 3억명이 이주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생산성향상의 유발로 앞으로 10년간 7~8%대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칭화대학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년 후에는 약6~7억명의 도시인구(전인구의 49.2%)가 증가하고 30년 후에는 10.2억명(전인구의 70%)의 도시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도시인구비율이 1%증가하면 개인소비수요가 1.2%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⁶⁾.

4)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Wang Feng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중국 역시 저출산 경향이 매우 심한 국가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은 경우에 따라 “한 자녀 정책”의 예외가 적용되었는데, “한 자녀 정책”이 면제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특정지역에서의 인구증가율이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다른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는 가까운 미래 중국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5) 제18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자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임된 리커창부총리는 중국도시화노력을 강조하고 농민들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THE WALL STREET JOURNAL, 28.February 2013)

6) 2011년도에 15~64세의 생산가능연령 인구는 10억233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74.4%를 차지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생산가능연령 인구비중이 낮아진 것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1억8499만명으로 비중이 13.7%로 0.47포인트 높아졌다. 65세이상 인구도 1억 2288만명으로 비중이 0.25포인트 높아져 9.1%에 달한다. 한편 도시인구는 6억9079만명으로 비중이 1.32포인트 높아진 51.27%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농촌인구는 1456만명 줄어든 6억5656만명에 그쳐 도시 인구가 농촌인구 보다 3423만명 많았다.

한편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가맹 이후의 투자 붐으로 과잉능력이 발생하여 자본수익률은 크게 하락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4~2015년경까지는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주도의 경제구조전환이 늦어 2015년 이후 성장률은 7%대 이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문제다. 2008년 리먼 쇼크 후에 실시된 4조위엔의 경기부양책 수혜는 정부나 은행과 관계가 깊은 국유기업에 독식되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민영기업의 쇠퇴는 혁신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國進民退의 경향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민간투자의 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로 이어지는 한편 국유기업으로 경제력편중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산업의 불균형 성장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 중국의 경쟁력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3. 중국경제와 대외환경

중국의 대외경제전략은 2000년대에 들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외직접투자전략으로 2001년 WTO가입이었다. 이 시기 중국은 국가와 기업이 국제화를 선언한 시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국제화를 위한 여러 제도정비이다. 예를 들면 대외직접투자 수속의 간소화, 기업의 진출국가 및 지역의 투자환경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간행 등 정보제공이 확대된 시기로 2003~2004년이다. 세 번째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지위의 향상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2009년 이후 시작된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전략은 중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되돌아보면 중국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기존의 강한 기득권 앞에 좌절되었다. 특히 강한 기득권은 외자를 포함한 기업의 신규진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를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표2)과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의 참가를 모색 중이다⁷⁾. 지난 2001년 WTO가맹도 중국에 있어서는 큰 모험이었으나

7)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6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발효된 P4(Pacific 4)협정이 근원이다. 그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가세하기로 했고 2009년 11월 미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참여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본 의회의 비준과 기존 참여국 모두가 동의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TPP는 다자간 FTA 모양이지만 관련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상의 미일의 FTA이다. TPP 협상 참여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이다. TPP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높은 단계의 FTA를 지향한다.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원리를 도입한 결과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한중일FTA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도 개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경우 중국기업이 다국적기업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국유기업의 과점체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국영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FTA협정이 완결되면 국영기업의 보호는 희석되고 민간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후진타오 원자바오는 개혁파의 이미지가 있었으나 결국 아픔을 동반하는 개혁은 뒤로하고 말았다. 위엔화의 변동환율이나 자본거래자유화등 거의 진전된 것이 없다. 그러나 신정권이 한중일의 FTA와 TPP등 중국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보면 적극적인 참가가 예상된다. 그것은 또한 시진핑 정권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모택동은 구소련과 대항이라는 대목적을 위해 미국과 거리를 좁히려 했었다. 미국도 중국시장의 매력을 버릴 수 없다. 현재로서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볼 수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광역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실적은 적다<표 1>.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은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에 있어 광역경제권을 가지게 되는 실험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인 위상도 함께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 중국은 어려운 국내경제 사정으로 보다 대외적 위상을 생각하여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그 첫 번째 무대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다.

<표 1>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진행 현황

상태	국가명	연도
발효완료	홍콩,마카오	2003
	ASEAN(상품무역)	2004
	칠레	2005
	파키스탄	2006
	ASEAN(서비스부문)	2007
	뉴질랜드	2007
	싱가포르	2008
	페루	2010
	대만	2010
교섭중	GCC(걸프만협력회의),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한국	-
공동연구 중	SACUC(남아프리카 관세동맹)인도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CEIC데이터(2011)

4. 중국경제의 대외의존전략과 한·중·일

4.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ssociation=FTA)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시아지역은 아세안협력기구가 FTA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세안은 1993년에 역내 자유무역지역(AFTA)발족을 계기로 2000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등과 ASEAN+1이라는 FTA망을 구축하였다. ASEAN은 2015년 “ASEAN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FTA범위의 확대로 물품관세철폐뿐 아니라 투자 및 인적이동을 포함한 역내 공동시장을 의미한다. 일본도 2국간에서 FTA보다 광범위한 연대를 위해 EPA(경제연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ASEAN이 중심이다. 일본은 연대범위를 확대한 한국에 비해 실적은 낮은 편이다. 중국 또한 자유무역에 있어서 아세안에 압도당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EPA체결 이후 주로 ASEAN국가를 중심으로 EPA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EU등 거대시장과 FTA체결에 관심이 높았고 FTA허브로 자리 매김에 전략적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중국은 ASEAN, 홍콩, 대만, 마카오, 파키스탄 등 이웃 국가·지역과 FTA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무역투자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에 ASEAN공동체를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ASEAN이라는 틀에서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은 각각 개별적으로 ASEAN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고 있어 동북아 3국간은 공백지대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각국 간에 나름대로 중요한 이슈가 존재했다. 한·일간에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확대와 중소기업의 타격 등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과제는 역시 한·일 농어업 분야의 쇠퇴 때문이었고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과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시스템의 차이도 지연요인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표 2> 한·중·일 FTA는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따로 체결할 경우 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후생 증가, 수출증가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다. 이는 3개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2개국 개별 FTA를 체결보다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한·중 FTA는 중·일등 그간 미루었던 역내 거대권역 FTA시도라는 점에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표 2> 한중, 한일,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 비교(%)

구분	한중일FTA	한중FTA	한일FTA
GDP증가	3.27	2.44	0.35
후생증가	1.74	1.13	0.16
수출증가	7.94	4.75	2.08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1)

2011년11월 AF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 맞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野田佳彦수상, 그리고 중국의 溫家寶총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정상회담을 가졌다. 이곳에서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교섭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각국은 상대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계기는 한국이 EU 및 미국과 FTA체결이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이 선행함으로써 중일 양국은 종래의 FTA전략을 수정하게 이르렀다 <표 3>.

한국은 외환위기로 자유무역화 가속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노무현정권 때는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었고 그 이후 EU나 미국과 체결이 실현되었다. 한국의 무역총액 중 FTA발효 국가나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이상(미국을 포함)에 달한다. 이는 20%미만인 일본과 비교하면 자유무역에서 한국이 많이 앞서 있다. 한국은 동시병행한 주요국과 교섭에 있어 EU나 ASEAN, 미국 등 거대한 선진적인 경제권을 가진 지역과 합의를 서둘렀다. 현재 교섭중인 FTA를 타결하면 상대국은 72개국,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전체무역의 80%에 달한다. 한국에 자극을 받은 중국과 일본도 FTA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FTA체결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내 협소한 시장을 해외에서 찾고자 하는 한국에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FTA체결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신흥국시장과 자원확보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교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3국간의 무역의존은 다른 타지역과의 연계보다 높다. 이들 지역과 FTA체결은 다른 지역보다 지리적, 무역량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다.

<표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진행 현황

상태	국가명	연도
발효완료	칠레	2004
	싱가포르	2006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2006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2007
	인도	2010
	구주연합(EU)	2011
	페루	2011
	미국	2012
교섭중	캐나다	-
	멕시코	-
	연안협력회의(GCC)	-
	호주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모르코	-
	중국	-
공동연구 중	한·중·일	-

주 : ASEAN과 FTA는 상품무역이 2007년, 서비스투자는 2009년 발효
 자료 : 외교통산부(2011)

중국은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의 대외개방에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FTA협정은 개별국가나 규모가 작은 협정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중·일은 광역경제지역으로 경제적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도 또 다른 우위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일찍이 한·일은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다. 이런 국가들과 FTA체결은 중국에 있어서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정치적 의미도 크다. 중국은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상에 있어 인구 13억의 거대한 중국시장과 경제의 긴밀화를 도모하는 것을 역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을 포함한 한·중·일과 자유무역협정에 그 무엇보다 무게를 두는 것은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패권도 염두해 둔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일본은 2002년 11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 광역권과 체결은 미진하였다. 예를 들어 EU와는 예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식교섭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미국과 FTA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장기목표는 APEC권과 FTA체결에 있고 그 과정으로 광역경제협력 이른바 ASEAN+6, 일본, 중국, 한국, ASEAN 10개

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CEPEA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 중국, 한국, ASEAN 10개국과 ASEAN+3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과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최대수출시장 중국과 산업연계관계를 가진 한국과 FTA체결을 서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토분쟁으로 한·중과 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경분리를 앞세워 다방면의 정책적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또한 한·중이든 한·일이든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외시장확대, 자원확보,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3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21개국과 먼저 체결을 하였다. 특히 21개국 중에는 중국이나 남미공동시장, 러시아, 호주, 중동협력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FTA문제는 언제나 정치 이슈가 된다. 앞으로 한·중·일 FTA교섭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한국에서 의견집약은 어려울 것이다. 선진적인 기술을 가진 일본에 한국경제가 종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른 FTA에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 이러한 환경은 결국FTA의 주도권을 중·일에 빼앗길 수 있고 교섭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에 3자간 협력사무국이 설치되게 된 것도 큰 전진이다. 한·중·일 관계를 FTA라는 형태로 결실시켜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규모나 정치적 영향으로도 한·중·일이 축이 되어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심화와 확대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한·중·일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중국은 현재 FTA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TPP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호주가 참가하고 있는 TPP참가를 기피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주도가 가능한 ASEAN+3의 FTA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ASEAN+3이 성공하고 TPP가 실패하는 것이다. 하지만 ASEAN+3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중·일 FTA와 투자협정에 속도를 낸 것도 일본을 FTA에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미 EPA와 같은 효과가 TPP다. 지금까지 경제연대는 2국간이 중심이었으나 복수국가간의 광역연대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TPP이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체결한 "P4"협정이 원조이다. 그 후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참가로 TPP는 APEC의 질적 변화로 볼 수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는 1989년에 발족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2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당시 무역자유화가 기대되었고 1994년에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보골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화의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하였고 아시아 통화위기 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APEC은 EU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같은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없고 각국의 자주노력에 위임원칙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TPP는 비구속의 성질을 구속적 성질로 경제연대의 효과를 높이는 등 수준 높은 FTA라고 할 수 있다. TPP는 예외품목 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 100%자유화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이다(투자 분야 제외). 특히 한국에 민감한 농림 수산물 포함을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단계적 관세가 철폐되어야 한다. <표 4>와 같이 TPP의 시장규모는 GDP규모는 17.5조 달러(참가11개국)이다. 이중 미국의 비중이 80%를 차지한다. TPP는 환태평양협력력이라고 해도 실상은 미국주도의 FTA에 가깝다.

TPP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배증계획과 자국경제의 재건, 고용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확보가 목적이다. 특히 TPP에서 2국간 FTA는 개방하지 못한 농산물 시장에 접근을 용이하게 위함이다. TPP회원국이 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최강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일본정부는 동아시아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TPP예정 국가(11개국)의 GDP는 17조 달러인 반면 한·중·일 구매력평가 GDP는 16조 달러(환율환산 12조 달러)로 손색이 없다. 이 지역은 성장률도 높다. 일본은 TPP참여도 새로운 성장전략의 기동으로 동아시아 중시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관세가 높기 때문에(중국 9%, 한국6.6%, 미국2.5%), 한·중·일 FTA체결로 관세가 면제되면 일본의 메리트는 크다.

<표 4> TPP와 한중일 FTA의 비교

구 분	GDP규모	성장률	관세율
TPP(11개국)	17조 달러	2~3%	2.5%
한중일FTA	PPP환율16조 달러(환율계산12조 달러)	7~10%	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

주 : TPP의 관세율은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한중일 관세는 중국의 공업평균 수입관세

그러나 TPP체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첫 번째는 중국의 TPP참가 불투명이다. 한일에 있어 중국은 세계1위의 무역상대국이다. 현재는 고관세 품목이 많아 중국의 참가 여부가

한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중국에 있어 TPP참가가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과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정부지원이 당연시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국영기업의 우대로 보고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 TPP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보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크게 진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있어 미국시장은 매력적인 곳이다. 따라서 중국은 TPP에 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TPP는 새롭게 참가를 표명한 일본, 캐나다, 멕시코를 더하면 GDP가 세계의 약40%를 차지하여 NAFTA, EU을 능가하는 경제권이 된다.

TPP규정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참가국은 매우 대담한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시스템과 산업구조가 아직 고도화되지 않는 중국에게 TPP는 참여 장벽이 높아 관망의 단계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으로서 경계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양자협상을 먼저 시작에 동의 한 것이다. 그 목적은 TPP로부터 일본의 눈을 아시아 자유무역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스스로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 5> 일본의 대 아시아 EPA·FTA진행 현황

발효완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교섭중	호주
교섭참가를 위한 협의 중	TPP
연구단계	한·중·일
구상단계	ASEAN+3, ASEAN+6, ASEAN, FTAAP

자료 : 日本財務省貿易統計(2011)

일본도 FTA에서의 늦은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표 5> 원래 미국의 관세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 TPP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관세는 높기 때문에 한·중·일 FTA체결은 일본에 큰 장점이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TPP권은 3%정도로 중국·한국은 7~10 %이며 시장성장률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FTA쪽이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의 경제적후생을 높이는 효과도 한·중·일 FTA쪽이 크다. 하지만 일본의 TPP참가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국가간 파워균형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의 주도권을 미국이 독점하는 것을 의식하는 중국은 일본과 관계강화를 서두르는 한편 한·중·일 FTA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이다. 중국도 일본과 한국시장은 매력이 크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중일은 ASEAN(동남아시아제연합)과 공동시장 형성에 ASEAN과 한중일(+3)을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덧붙여 미국과 관계가 깊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참가시킨(+6)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에 있어 급한 것은 한중일의 FTA의 실현일 것이다. 이미 FTA의 공동연구는 종료되었고 정부간 교섭단계에 들어갔다. 미국주도의 높은 요구의 TPP(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보다 중국에 있어서는 중국주도의 틀을 만들기가 가능한 한중일 FTA체결에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해 체결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그동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노력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매년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는 2001년부터 진행되었으나 정부간 교섭에는 이르지 못 했다. 그 이유는 일본이었다. 중국은 이전부터 FTA에 적극적이었으나 일본은 미국과 우선적인 FTA체결에 무게를 둬으로써 중국과 교섭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에 있어서도 FTA의 이점은 많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금융연구소에 의하면 한중일이 FTA를 실시할 경우 실질 GDP효과는 0.74%로 TPP의 0.5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중일은 2국간의 교섭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하여 동남아시아와는 대조적으로 FTA공백지대였다. 반대로 한국은 한중일이 FTA가 대중무역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현재 한중 FTA는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전이 있어 2012년에 정식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중일 FTA는 이해대립의 염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서로의 이해관계 협상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PP의 진전으로 중국은 미국주도의 경제연대에 대한 견제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과거 중국은 ASEAN(동남아시아제국연합) 및 한중일 FTA의 교섭을 우선시 하였고 TPP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일본이 TPP참가교섭을 표명함으로써 태도가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이 TPP로 기울게 되면 중국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TPP의 내용과 방향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주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산업의 기득권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TPP참가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WTO에 가맹하지 않았을 것이다. TPP가 확대되어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다.

미국이 TPP를 이용하여 중국포위망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미국 또한 자유무역권이 확대되면 이익도 많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보호 등에서 중국에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중국의 참가는 TPP의 위상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권에 어떤 형태로든 귀착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의 모색에 있어 미국 없는 경제권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중국의 참가 없이는 그 가치도 낮을 것이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에 있어 한국경제가 개방을 지향하고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FTA든 TPP든 그 어느 한쪽에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다. 앞으로 TPP가 역내의 무역자유화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명진호(2010)『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2010년 전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산업연구원(2010.3)『세계 1위의 수출대국이 된 중국』
 최용민(2010)『최근 주요국의 수출확대 전략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09.10)『중국 500대 제조업 현황』
 기획재정부(2008)『한중일 FTA 미간공동연구 심포지엄 및 제3차 워크숍』
 이영모(2008)『한중무역 구보변화와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정형곤(2008)『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KIEF오늘의 세계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평섭,구은아(2007)『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KIEF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숙(2007)『한중 가전 교역 구조분석과 향후 발전방안』KIEF산업경제
 한국무역협회(2007)『한국의 대중, 대일무역 수지변동요인 분석』동향분석실
 KIEP(2008)『2006년 대중무역 흑자감소의 원인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IRA(2002-2008)『중국통상정보』각 월호
 정상은(2006)『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삼성경제연구소
 손주찬(2005)『韓中日自由貿易協定(FTA)의 展望과 競争法(條貫cancun 閣僚會議)의 실패와 韓日FTA協商의 시
 작을 契機로 본 亞洲地域主義의 展望』『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한국법제연구원
 28.February 2013. THE WALL STREET JOURNAL.
 지만수외(2004)『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KIEF연구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玉村千治(2005)『東アジアFTA構想と日中間貿易投資』『調査研究報告書新領域研究センター編』日本貿易振
 興機構アジア經濟研究所領域研究センター
 朱 淡(2003)『中国の自由貿易協定へのアプローチとその影響』『Economic review』富士通經濟研究所
 藤川清史他1人(2002)『日本韓国中国の自由貿易協定の經濟効果』『イノベーション&I-Oテクニク』環太平
 洋産業關連分析学会

- 高安健一(2002)「ASEAN·中国の自由貿易協定と日本の対応」『アジア・マンスリー』日本総研調査部環太平洋戦略研究センター
- 劉昭陽외2인(2011)「中日韓自由貿易協議对中国農業的經濟与環境影響研究—基釀于可計算局部均衡模型的分析」『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北京師範大學
- 呂夢丹(2010)「中國對外締結的區域貿易協定中的貿易救濟措置-規則與實踐分析」『碩士論文』對外經濟貿易大學
- 楊軍紅(2009)「中國自由貿易區的新制度經濟學分析」『武漢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武漢理工大學
- 王洪彬(2009)「中日韓自由貿易區的路徑選擇問題研究」『中國經濟導刊』吉林工商院經貿分院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要旨〉

中國의 經濟成長과 自由貿易에 관한 고찰

- 한·중·일을 중심으로 -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융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를 한 층 증폭시켰다.

지금 세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세계 GDP규모는 약 63조 달러로 2016년이 되면 8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중국의 GDP규모는 5.9조 달러로 세계 9.4%, 하지만 2016년에는 11.6조 달러에 달해 13.1%로 증대가 전망된다.

중국도 이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시장전략을 한층 강화해야만 한다.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WTO에 가입한 2001년 38.5%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 51.9%를 돌파했고 2006년에는 67%를 기록하였다. 2011년 말에는 50.1%로 다소 하락은 하였지만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이 30%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는 무엇보다 대외시장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은 대외시장의 확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중·일 FTA는 중국의 최대 관심사이다. 한·일은 세계적으로 경제강대국으로 상호교역의 확대는 중국경제에 있어 절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중·일은 2국간 자유무역 교섭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하여 동남아시아와는 대조적으로 FTA의 공백지대이다. 한국은 한·중·일이 FTA가 대중무역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도 이미 동等的한 상태이다. 중국 역시 FTA는 적극적이다. 또한 미국주도의 TPP도 주요 관심사다. 중국의 참가는 TPP의 위상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권에 어떤 형태로든 귀착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의 모색에 있어 미국 없는 경제권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중국의 참가 없이는 그 가치도 한 층 낮을 것이다.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다. 앞으로 TPP가 역내의 무역자유화에 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tudy on China's economic growth and free trade

- In Korea, China, Japan -

Financial crisis starting from Europe immensely disturbed the world's financial market. Stock market collapsed, and exchange rate skyrocketed. To make matters even worse, China's retrenchment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financial regulation amplified the crisis.

Currently, the world pays attention to China which has steadily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In 2010, the world's GDP level was about 63 trillion dollars, and by 2016, it is expected to reach 89 trillion dollars. During the same period, China's GDP level was 5.9 trillion dollars, 9.4% of the world's GDP, but by 2016, it would increase to 11.6 trillion dollars, 13.1% of the world's GDP.

In order to continue this high economic growth, China has to enforce foreign intentional strategy. According to the series of the China's maritime customs, China's foreign trade dependency was only 38.5% when it first joined WTO, but it reached 51.9% in 2003, and in 2006, it reached 67%. At the end of 2011, it dropped a little to 50.1%, but considering that countries like the U.S., Japan, India, and Brazil are only 30%, China's foreign dependency is immensely high. In China's economy which highly depends on foreign countries, foreign market expansion policy is necessary. In recent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hina's active position is related with this foreign market expansion policy.

Especially,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China's biggest interest. Korea and Japan have world-known economic power, so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China to expand mutual trade. However, up to now, despite free trade negotiation between two countries, Korea, China, Japan have been constantly tepid and have FTA gap comparing to Southeastern Asia. Korea has become active in signing FTA because there has been profit coming from FTA. Japan has already agreed on it. China is also active in FTA. Furthermore, TPP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main interest. China's participation not only raises the status of TPP but also helps the United States' national profit. Japan will come to Asia Pacific's Free Trade in any form. In seeking currently proceeding free trade in Asia Pacific, economic bloc without the United States will be impossible, and the value of it will be lower without China's participation.

Korea has already signed FTA with countries which are participating in TPP or been in negotiation. By observing how TPP would function in free trade movement, strategy in the medium to long term will be necessary.

